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화

2024/ 7/17 통권 168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올해는 7월 31일까지 신고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적세탁, 가상자산은닉, 해외원정진료소득 탈루 역외탈세 백태
- 생활염증 신규 57만 8천 명, 통신판매업 5년 연속 1위
-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기준판매비율에 의하여 가격인하 전에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중인 주류는, 실제 판매시점의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함 (p.9)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음식점,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율>

개념, 구분	매입세액공제해당품목, 공제율, 공제이유, 관련규정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108분의8, 농산물가액의 80% 과세원재료로 구성(부가세법 제42조)
과세유흥장소	법인, 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102분의2,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20% 내외(부가세법 제42조)
기타 음식점	법인·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106분의6,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60% 내외(부가세법 제42조)
과자, 떡방 등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106분의6,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60% 내외(부가세법 제42조)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104분의4,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40% 내외(부가세법 제42조)
기타의 사업	법인·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102분의2,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20% 내외(부가세법 제42조)
재활용 폐자원	법인·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103분의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폐자원 수집자	법인·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103분의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폐기물 중간처리	법인·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103분의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자동차매매업자	법인·개인의 중고자동차구입액×11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중고자동차 수출	법인·개인의 중고자동차구입액(1년 이상 차)×110분의10, 영세율이니 부가세 환급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4호 / 주간 29호

2024. 7. 17.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음식점,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율	표지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체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꽃 매출 면세 및 과세 여부 관련하여 - 대금결제 지연이자 회계처리 - 대손채권	2 3
눈에맞는 절세미인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4
매일 절세재무요점	-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 - 역동경제 로드맵 상속세 개편 계획	6 7
직장인 Survival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열쇠	8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 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 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화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법규부가-21, 2024.01.2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 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사전법규법인-665, 2023.10.25)	9 10
세정뉴스와 해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1
마케팅 Tax consulting	기준판매비율에 의하여 가격인하 전에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중인 주류는, 실제 판매시점의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함	9
세무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 게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적세탁, 가상자산은닉, 해외원정진료소득 탈루 역외탈세 백태 - 생활업종 신규 57만 8천 명, 통신판매업 5년 연속 1위	12 23 31 40
회계정보	- 감사반의 독립성인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30

체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직원이 해외 출장시 발생한 체류비에 대하여 직원에게 체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체류비를 직원 소득으로 반영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해외 출장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영수증, 카드명세서)이 있거나 회사내의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출장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도 없고 출장비 지급규정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꽃 매출 면세 및 과세 여부 관련하여

Q 1) 호텔 내부 행사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호텔에서 외부로 케이터링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생화를 다듬어서 장식해주는 것이며 화학적 가공처리 등은 하지 않습니다.

A 1. 생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부수되어 생화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부수재화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대금결제 지연이자 회계처리

Q 당사(갑)가 매출거래처(을)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는 아닙니다.
갑과 을은 "대리점 거래 협약서"를 협약했고 협약서 내용에는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조항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내용은 대금결제는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기준으로 정해진 회수기일내에 입금하며 회수기일 초과시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계산후 이자는 "을"의 수금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5%의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안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때는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손채권

Q

s차 회생채권 변제인가로

2.4억 채권중 0.3억 현금변제 나머지 주식전환후 감자(3:1)입니다.

우선 현금변제부터 들어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인가일)

출자전환채권 2.4 / 채권 2.4

선수금 0.3 / 대손충당금 1.4

대손상각비 1.1

A

미회수 채권 중 일부가 현금으로 변제된 경우는 해당 채권가액과 현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0.3 대) 채권 0.3

추후 나머지 채권(2.4-0.3)금액 중 대손처리 후 잔액은 주식전환시점에 자본금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 등 물론 유지 관리비 등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 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하며, 소급된 취득일부터 각 사업 연도별로 발생한 경비비용처리액·유지비·수선비 및 관리비 등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거 유예기간동안의 손금처리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과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서이46012-11749, 2003. 10. 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 사도법상의 도로,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로 양도되는 부동산 등 기타의 불가피하거나 경제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 서이-1804, 2005. 11. 0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현행	배당 전체 ×14%	배당 전체×비교 종합과세(14~45%)
개정	밸류업기업 배당 증가금액 등×9% + 그 외 배당×14%	1) 배당 증가금액 등×25% + 그 외 배당×비교 종합과세 2) 배당 증가금액 등(2000만원 한도)×9% + 그 외 배당×비교 종합과세

※ 기획재정부

화

금투세 시행 되면 배우자 양도세 부담 늘어

과세 변경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해당 주식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간주
적용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공제 금액	해외 주식 250만원, 국내 주식 5000만원



역동경제 로드맵 상속세 개편 계획

	현행	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30억원 초과 과표 상속세율 50% + 최대주주 평가액 20% 할증 = 최고세율 60%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 과표, 세율 조정 검토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조건 1개 이상 충족시 ①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 ②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연구개발(R&D) 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 ③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 or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특구로 이전
가업상속 공제한도	과세가액 공제 최대 600억원	과세가액 공제 최대 1,200억원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규정 비교

구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	○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	○ (승계취득 제외)	-
1주택자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 택 비과세	○	○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 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 (승계취득 제외)	-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열쇠

긴밀한 관계는 정서적 애착이나 깊은 애정에 바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반드시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존경을 갖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을 노출하라.

상대방이 당신을 근본적으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한다.

둘째, 질문하라.

당신이 상대방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이 질문한다.

셋째, 조언을 구하라.

상대방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조언을 구한다. 특히 자기회의 혹은 불안함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기꺼이 조언을 구하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기준판매비율에 의하여 가격인하 전에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중인 주류는, 실제 판매시점의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함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
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
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
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법규부가-21, 2024.01.24

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
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
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
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
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916, 2023.12.08

Ⅰ 질 의

- 신청법인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함

질의

- 사업자가 가격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실제 판매되는 인하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Ⅰ 회 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 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

Ⅰ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추진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의 임원 등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합병 후 신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이하 "쟁점비용")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쟁점비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사전법규법안-665, 2023.10.25

■ 질 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취득 후 해당 주식거
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술혁
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
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
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
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
께 이취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
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
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취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
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취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 질 의

- 이취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이취권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
우로서, 이취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양도소득세 신
고기한내에 이취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소득법 94①(4)마목 및 소득령 158
의2(이하 “쟁점규정”)의 이취권 가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
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
른 이취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취권”)는 양
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취
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
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
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
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취권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
액으로 이취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취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속세·소득세 높아... 증부세, 재산세와 통합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주경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율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둘 다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도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1997년, 2000년 이후 개편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7%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되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증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세수 펑크에도 서민 증세는 없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로 나누어 과세되고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ARS ▲현금인출기 ▲가상 계좌 납부 ▲ETAX(서울시) ▲서울시 STAX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한 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5%로 유지한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계,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해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섰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 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이익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이익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현실화, 중도해지 요건 완화, 퇴직소득세 미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 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이익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이익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현실화, 중도해지 요건 완화, 퇴직소득세 미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국세청, 2024. 7

- (신고개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 1. 1. ~ '24.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4. 1. 1. ~ '24.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4. 1. 1. ~ '24. 6. 30.
	예정고지 미 대상	'24. 4. 1. ~ '24.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신고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1)
 -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참고2)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입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 (신고도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개 별 도움자료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14.까지 지급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3)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 통 도움자료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 별 도움자료	○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¹⁾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²⁾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 1) 법정 지급기한(8. 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 24.)보다 10일 조기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3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 ①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②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 ③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④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 ~ 7.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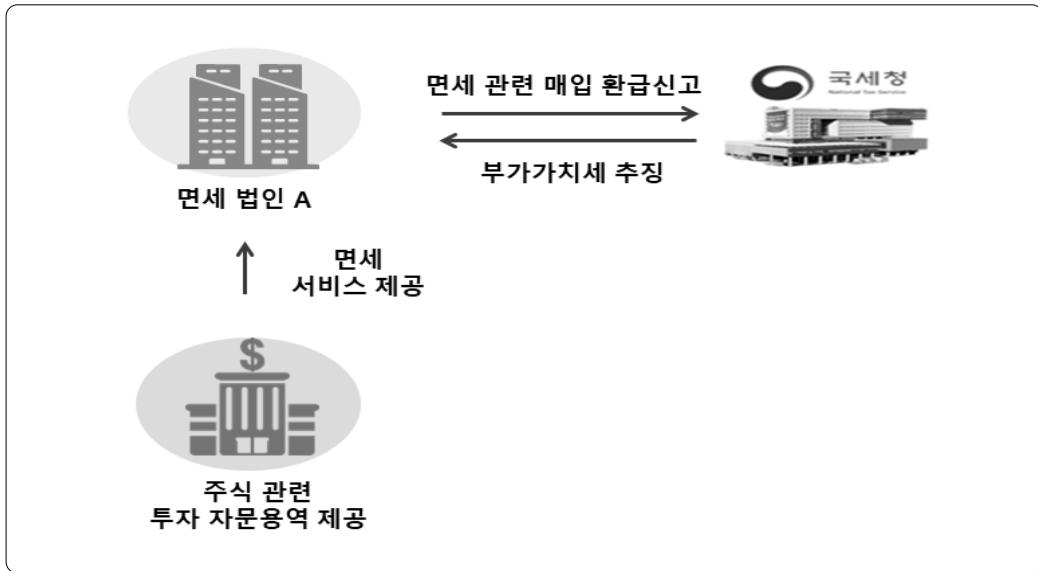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 7. 0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 7. 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 7. 12.	
4		신용카드 매출	24. 7. 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4. 7. 15.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 7. 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 7. 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 7. 0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 7. 12.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 7. 12.	
1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 7. 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 7. 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4. 7. 01.	
14		재고납부세액	24. 7. 0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4. 7. 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4. 7. 0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4. 7. 0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4. 7. 0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4. 7. 01.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 7. 11.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 7. 12.	
22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7. 15.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 7. 0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4. 7. 0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 7. 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7. 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7. 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 7. 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 7. 15.	
30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참고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사례 1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신고확인)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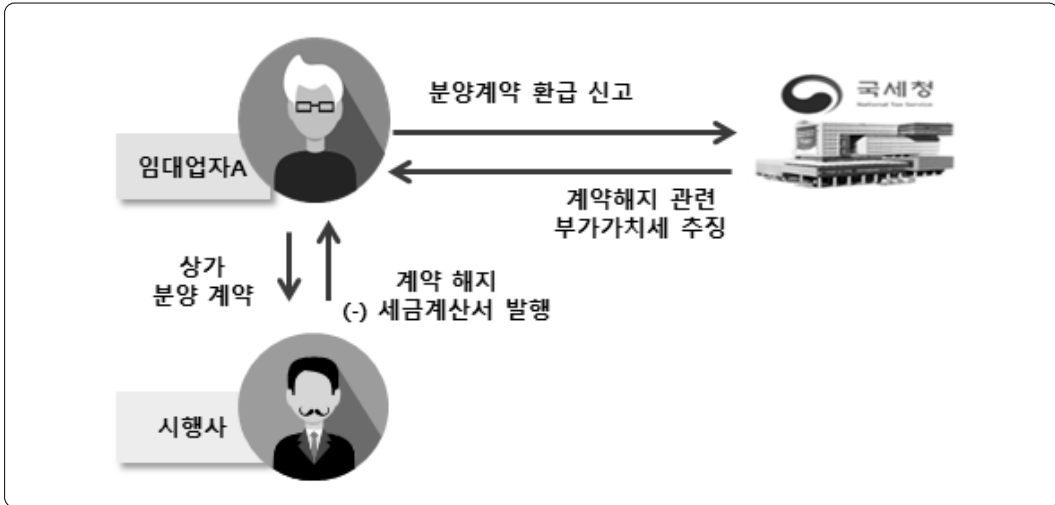
-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사례 2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신고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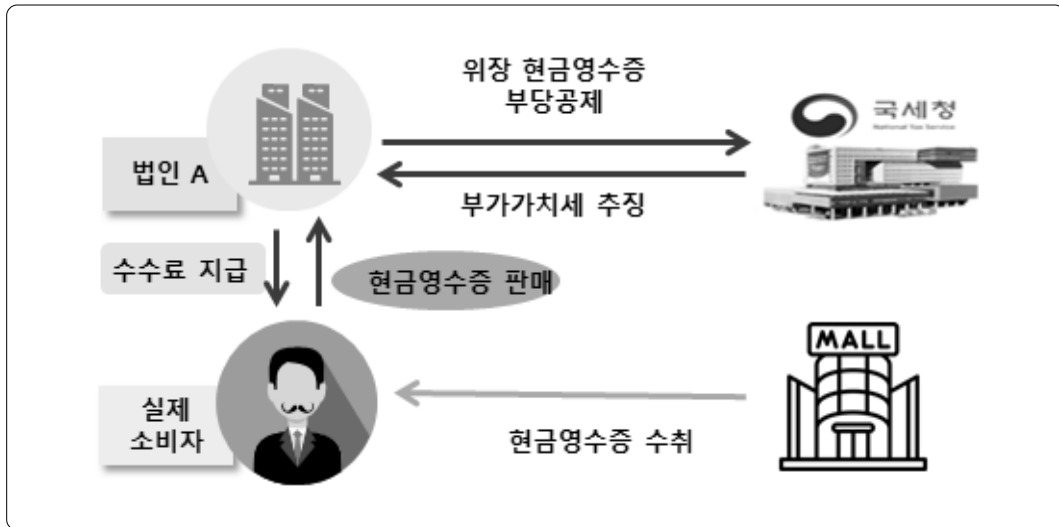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환급 신고
- 분양권을 취득하여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함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호
-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하여야 함

사례 3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부당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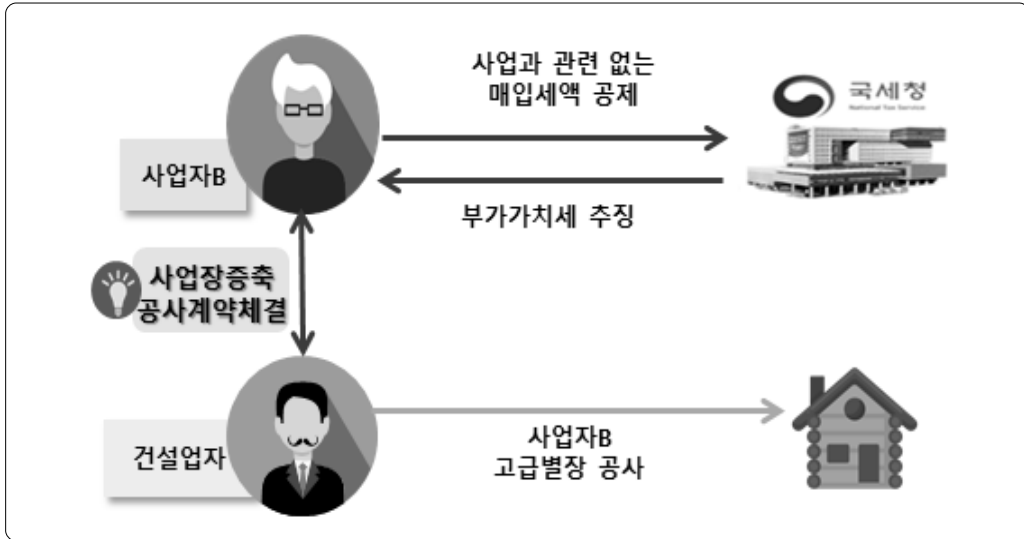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적게 신고
- 매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사례 4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환급)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 －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일감몰아주기 · 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세청, 2024. 7.

- 2024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수)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신고 예상자와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하였고,
 -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4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하여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 사례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작성요령/사례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
-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포함) ×
-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 시 증여세 수정신고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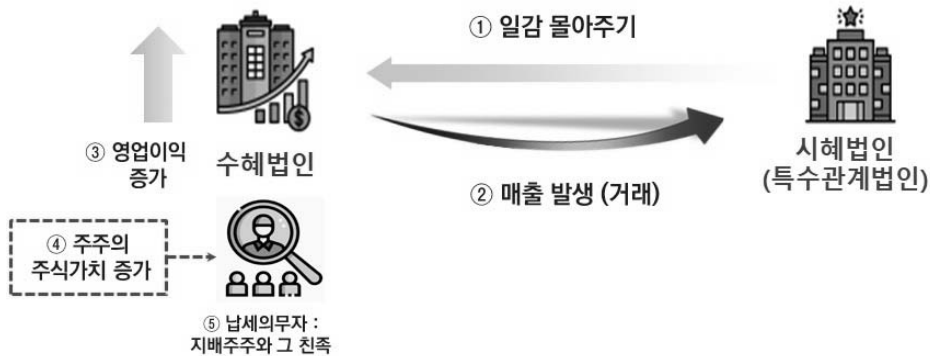
엄밀한 신고 검증 예정, 성실 신고 당부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 문답자료(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한 비율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23.2.28.개정)

4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	--

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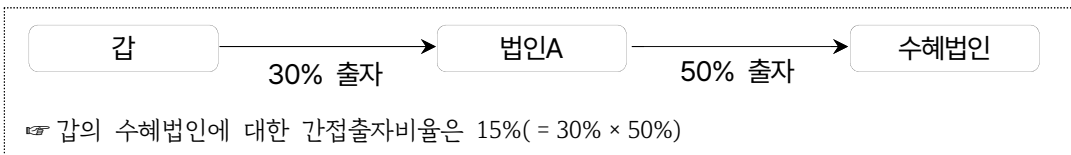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용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상증령 § 34의3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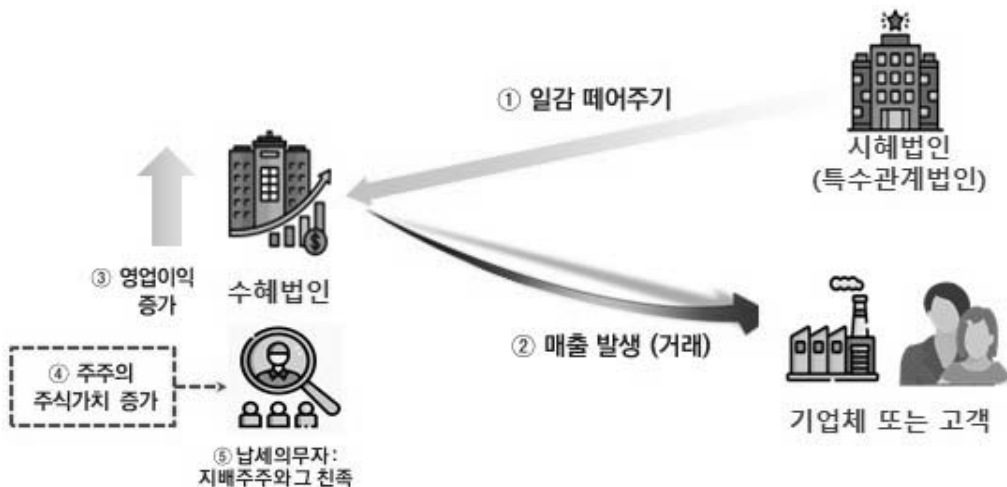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참고 2 - 문답자료(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4 출자지분을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② 정산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2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1년부터 '23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5일 (금)	7월 8일 (월)	7월 9일 (화)	7월 10일 (수)	7월 11일 (목)
미 달 러 (USD)	1381.90	1379.00	1379.40	1383.40	1385.60
일 본 엔 (JPY)	856.86	858.07	858.13	857.36	857.53
영 국 파 운 드 (GBP)	1762.96	1766.15	1767.15	1769.16	1780.70
캐 나 다 달 러 (CAD)	1014.98	1010.59	1011.88	1014.71	1017.51
홍 콩 달 러 (HKD)	176.96	176.50	176.63	177.10	177.39
위 안 화 (CNH)	189.26	189.18	189.13	189.89	190.07
유 로 화 (EUR)	1494.04	1492.77	1493.68	1496.22	1501.02
호 주 달 러 (AUD)	929.54	930.20	929.51	932.90	935.42
싱 가 폴 달 러 (SGD)	1022.53	1022.16	1022.00	1024.29	1027.4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43	292.84	292.93	293.87	294.78

국적세탁, 가상자산은닉, 해외원정진료소득 탈루 역외탈세 백태

- 국세청, 2024. 7

◆ 세무조사 추진 배경

-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 * 최근 2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3회 발표('22.11월, '23.5월·12월)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 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I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I

- 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 ②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③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 ④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 유형 1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 (11명)

-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입니다.
-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습니다.
 -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였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 *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 운영
-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 유형 2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 ICO(Initial Coin Offering) :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
- 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였으며,
 -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습니다.

◆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

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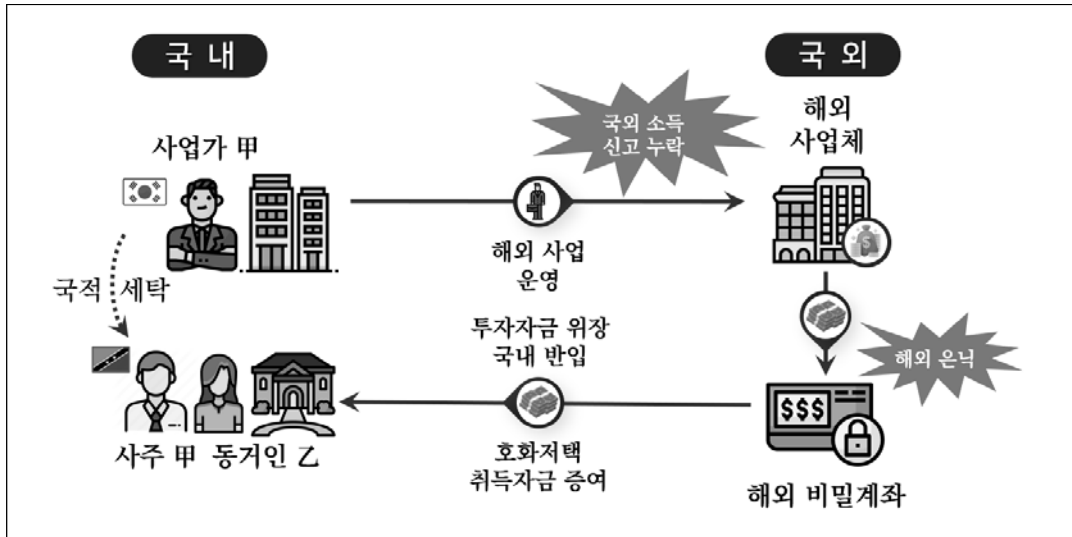
-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고
 -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 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습니다.
 -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 유형 4 :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1

수백억 원의 해외 수익을 국내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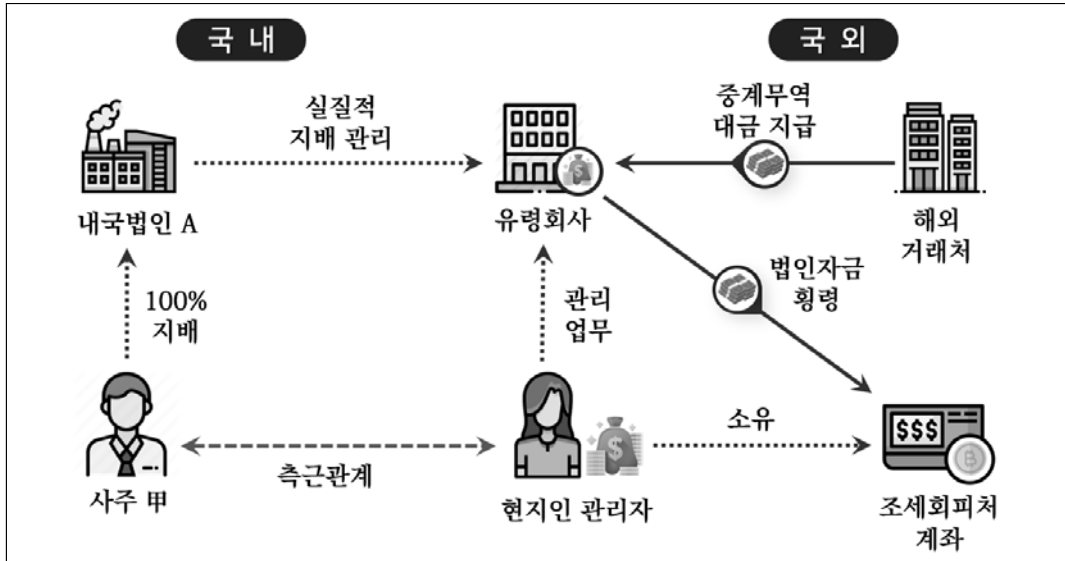
- (외화소득 해외은닉)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
 -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
 -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
- *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며 추적 회피
- (은닉자금 증여)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 구입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 000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2

해외 유명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엔 1달러 한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



□ 주요 탈루혐의

- (중계무역 소득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명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그 결과,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영업
- (은닉자금 유출) 해외 유명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으나,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하여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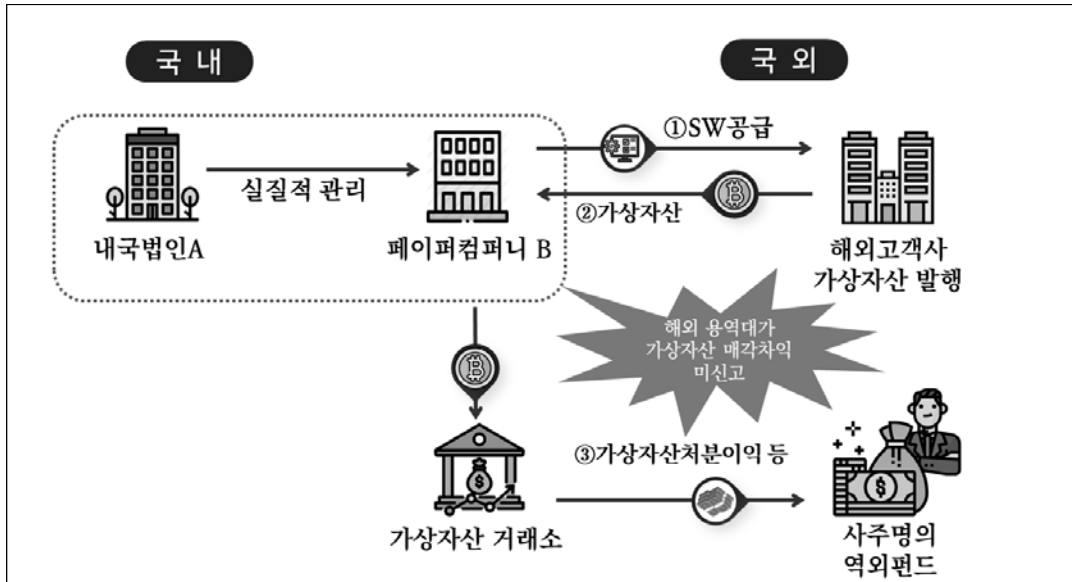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000억 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고,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3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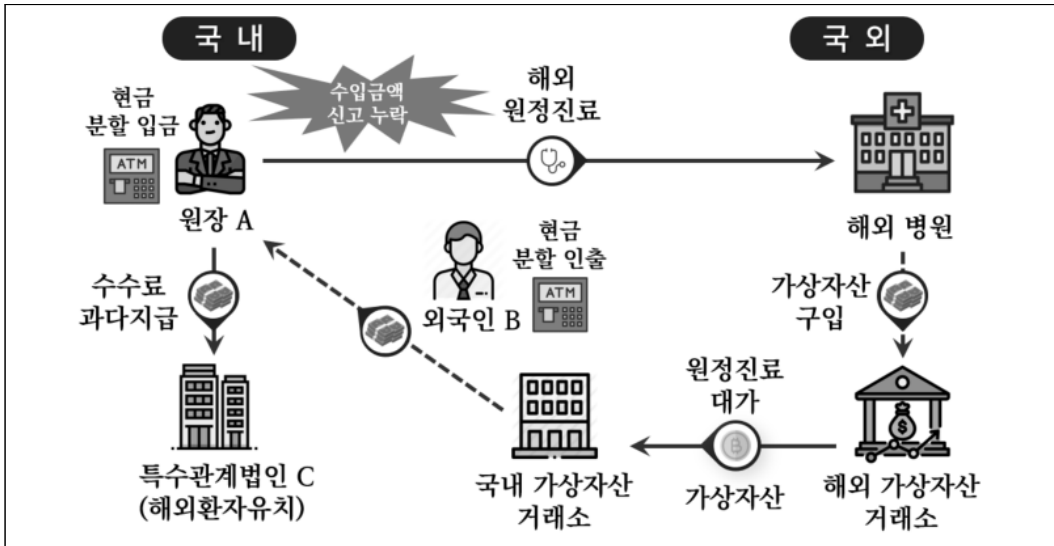
- (해외 용역대가 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미신고
-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
 - 또한,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 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

□ 향후 조사방향

-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00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 부과

사례 4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



□ 주요 탈루혐의

- (원정진료대가 누락)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
-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 (유치수수로 과다 지급) 원장 A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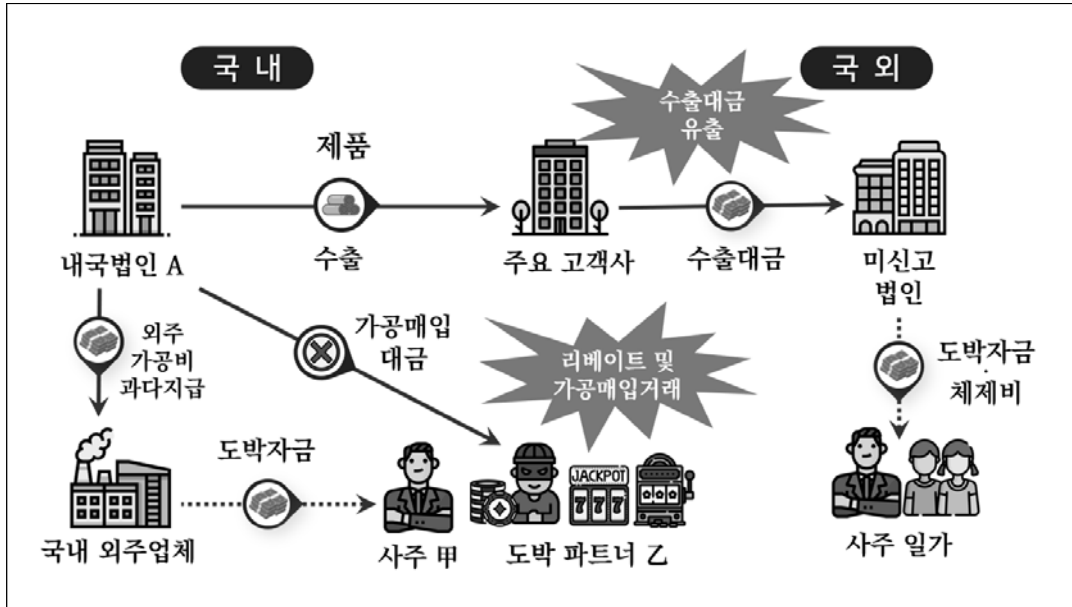
□ 향후 조사방향

-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00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사례 5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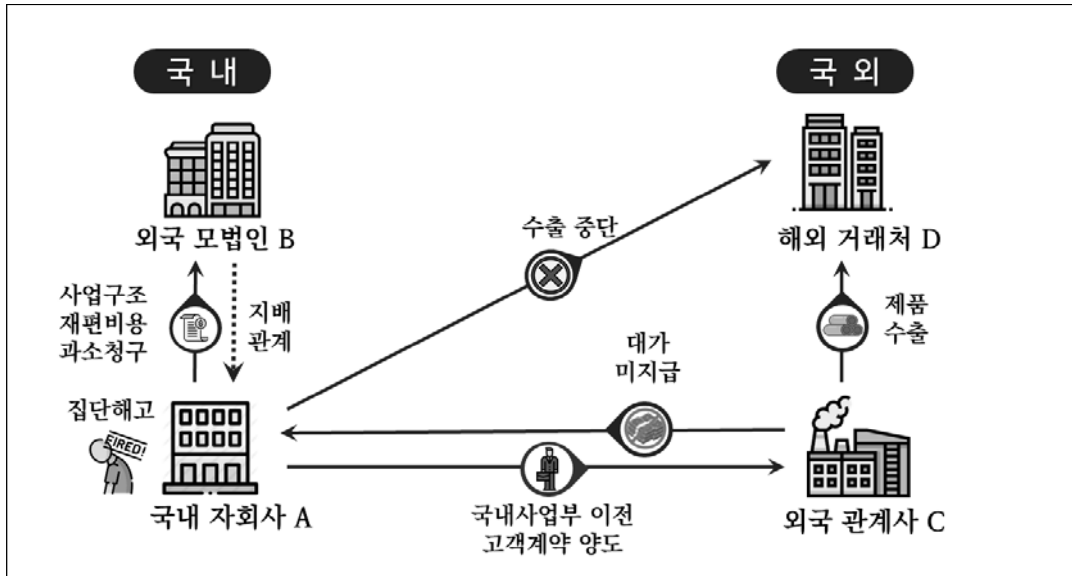
- (수출대금 유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
- (리베이트 거래)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유출
- (가공매입 거래)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 유출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0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 자금 등으로 쓰인 0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6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건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



□ 주요 탈루혐의

- (알짜사업부 무상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 이전
 -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 향유
- (집단해고 비용 과소 수취)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됨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받아 국내 법인세 과소신고

□ 향후 조사방향

-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0,00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생활업종 신규 57만 8천 명, 통신판매업 5년 연속 1위

- 국세청, 2024. 7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개(6.28.)하는 국세통계는 주요 세목 신고 및 사업자 통계 등 181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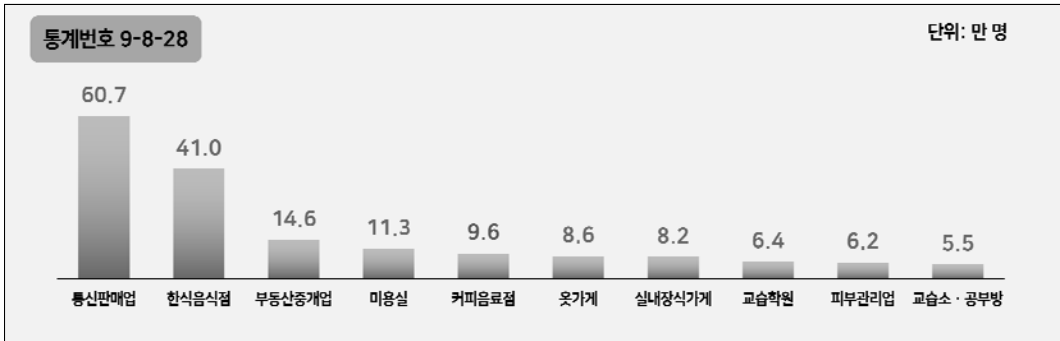
- 상속·증여세 : 신고·결정 현황 총괄, 납세자·자산종류별 결정 현황, 분위별 결정 현황 등
- 종합부동산세 : 지역·성·연령·분위별 결정 현황, 분납 신청 현황, 주택·토지분 결정 현황 등
- 법인세 : 신고·결정 현황 총괄, 업태·수입금액 규모별 신고 현황, 가동 법인수 등
- 부가가치세 : 신고·결정 현황 총괄, 지역·업태별 신고 현황, 전문직 신고 현황 등
- 사업자 : 지역·성·업종·연령별 가동·폐업·신규 사업자 현황
- 생활업종 사업자 : 지역·월·연령별 신규 사업자 현황, 성·연령·존속연수별 가동 사업자 현황
- 주세·소비제세 : 주세 신고 현황 총괄, 주류·지역별 신고 현황, 소비제세 신고 현황 총괄

□ 특히, 창업 트렌드 변화가 연령별·지역별로 잘 드러나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302.2만 명, 전년 대비 3.4%증가

-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23년말 기준으로 302.2만 명으로 전년(292.3만 명) 대비 9.9만 명(3.4%) 증가하였습니다.
-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60.7만 명), 한식음식점(41만 명), 부동산중개업(14.6만 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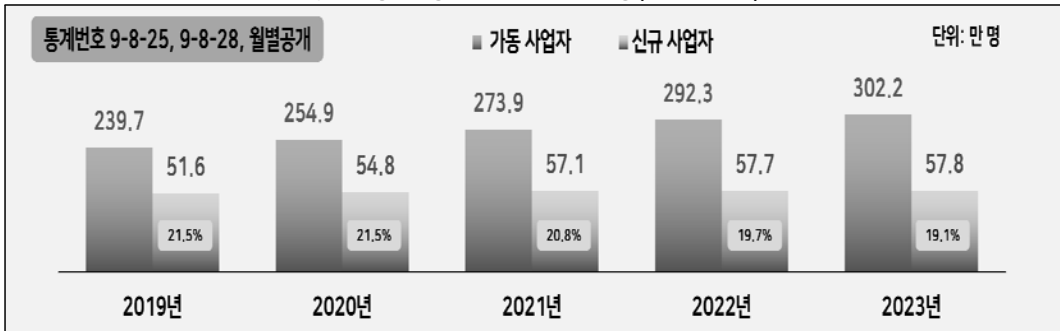


2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57.8만 명, 지속적으로 증가세

- 창업 트렌드 변화가 잘 드러나는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는 '23년도 57.8만 명으로 전년(57.7만 명)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 '23년도 신규 사업자 수는 가동 사업자 수 대비 19.1% 수준이며 '19년 이후 가동·신규 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가동사업자) '19년 239.7 → '23년 302.2만 명, (신규사업자) '19년 51.6 → '23년 57.8만 명

<생활업종 가동·신규 사업자 현황('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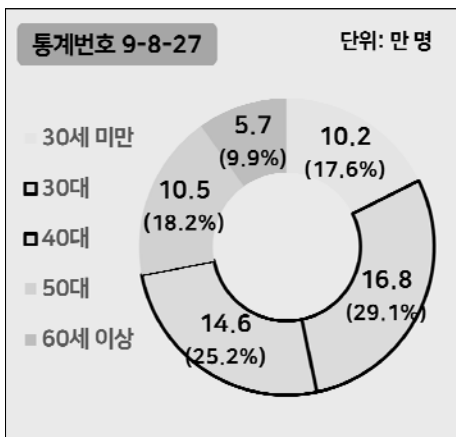


3

신규 사업자 모든 연령대 1위 통신판매업, 2위 한식음식점

-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16.8만 명, 29.1%), 40대(14.6만 명, 25.2%)가 1, 2위, 그다음으로 50대(10.5만 명, 18.2%), 30세 미만(10.2만 명, 17.6%), 60세 이상(5.7만 명, 9.9%) 순으로 많았습니다.
- 업종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30세 미만·30대·40대는 커피음료점, 50대·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규 사업자(연령별) >



<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 연령별 상위 업종 >

순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60세 이상
1위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2위	한식음식점	한식음식점	한식음식점	한식음식점
3위	커피음료점	커피음료점	커피음료점	부동산중개업
4위	피부관리업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	커피음료점
5위	패스트푸드점	교습소·공부방	부동산중개업	실내장식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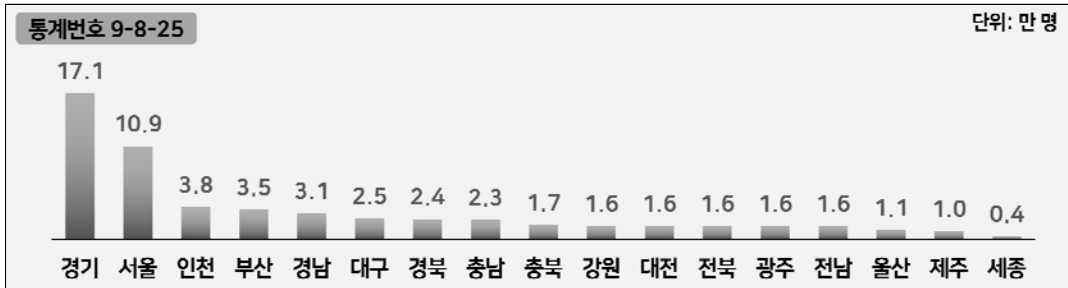
4

신규 사업자 수도권 55% 차지, 충청·강원 증가세, 세종·서울 감소세

-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기 17.1만 명(29.6%), 서울 10.9만 명(18.9%), 인천 3.8만 명(6.6%)으로 수도권 지역

이 55%를 차지하였습니다.

<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지역별) >



-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 지역은 증가하였고,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등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전년 대비 증감률(지역별) >



- 아울러 올해 9월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 감면 및 접대비 · 기부금, 12월에는 종합 · 양도소득세 및 연말정산 신고 현황, 근로장려금 통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국세통계를 지속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 100대 생활업종 개요

- (100대 생활업종)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
- 국세청은 '14년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40개 업종을 선정하여 관련 통계를 공개하였고 '17년 이후에는 100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 '21년 4월부터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음
 - * 월별공개(시·군·구별 사업자 현황),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카드뉴스

[100대 생활업종 명세]

구 분		업 종 명
소 매(36)		가구점, 가전제품판매점, 건강보조식품가게, 건어물가게, 곡물가게, 과일가게, 꽃가게, 담배·복권소매업, 문구점, 생선가게, 서점, 슈퍼마켓, 스포츠용품점, 시계·귀금속점, 식료품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애완용품점, 옷가게, 약국, 의료용품가게, 이륜자동차판매점, 자전거판매점, 장난감가게, 정육점, 주유소, 중고차판매점, 채소가게, 철물점, 침구·커튼가게, 컴퓨터판매점, 통신판매업, 편의점, 화장품가게, 휴대전화가게, LPG충전소
음 식(12)		간이주점, 구내식당, 기타외국식음식점, 기타음식점, 분식점, 일식음식점, 제과점, 중식음식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음식점, 호프음식점
숙 박(2)		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서비스(50)	병·의원(13)	내과·소아과의원, 동물병원, 산부인과의원, 성형외과의원, 신경정신과의원, 안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일반외과의원, 종합병원, 치과의원, 피부·비뇨기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기타일반의원
	전문직(9)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교육(5)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기술·직업훈련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예술학원
	기타(23)	가전제품수리점, 간판광고물업, 결혼상담소,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목욕탕,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세탁소, 스포츠시설운영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실내장식가게, 실외골프연습장, 여행사, 예식장, 이발소, 자동차수리점, 주차장운영업, 피부관리업, 헬스클럽, PC방

* 100대 생활업종의 상세 분류 코드(기준·단순경비율)는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참고

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2024. 7

I 조치 개요 및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감사반(이하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이하 '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가 독립성의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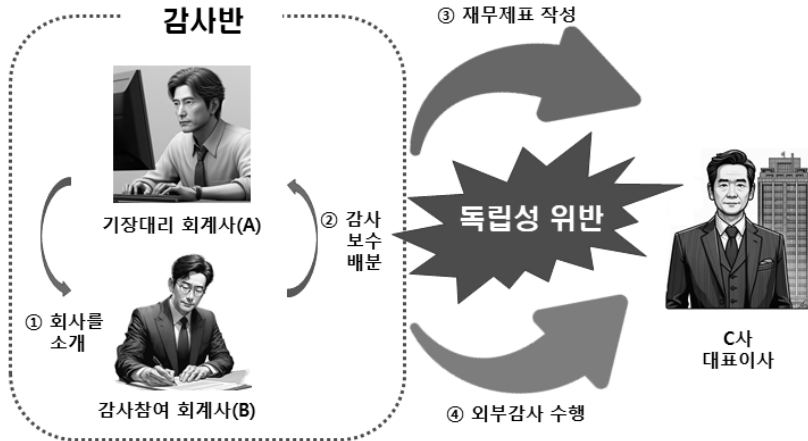
기장대리 공인회계사(A)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B)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와 B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하였습니다.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외부감사법 §6⑥)

공인회계사(B)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A)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거래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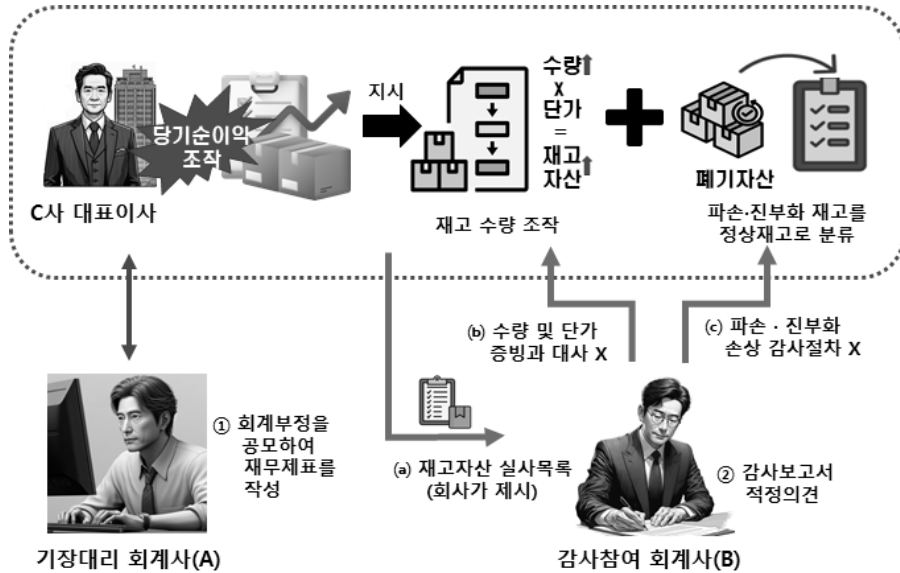
- ① 기장대리 회계사(A)가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B)에게 외부감사를 소개
- ② 감사참여 회계사(B)는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A)에게 배분
- ③ 기장대리 회계사(A)는 재무제표를 작성 · 제시
- ④ 감사참여 회계사(B)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적정의견 표명

나 기장대리 회계사의 분식공모 및 감사반의 부실감사

C사는 기장대리 회계사(A)와 공모하여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 ·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참여 공인회계사(B)는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파손 · 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 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사 기말 재고자산금액 조작 지시 및 부실감사



<거래설명>

- ① 기장대리 회계사(A)는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게 재고자산금액을 조작하도록 C사 회계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 ② 감사참여 회계사(B)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실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적정 감사의견 표명
 - (a)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b) 재고자산 수량·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는 기본 감사절차 조차 미수행
 - (c) 파손·진부화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전혀 미수행

2

유의사항

①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위반(외부감사법 §6⑥)

②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한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있거나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부감사 수행 불가(외부감사법 §9③)

- ◆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내용을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검색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또한, 관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